

최저임금 인상 억누른 정부

■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6년 법정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 월 2,156,880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 적용) 심의를 시작한지 80일 만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10,0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 위원들만 참여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막판 심의과정에서 항의성 퇴장을 하였습니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여 그 범위안에서 결정)의 상한선(4.1% 인상)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첫 인상률(5.0%)은 물론 최근 체감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 중소영세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최저임금이 아니라 고질적인 한국사회의 재벌과 원청의 수탈 구조입니다. 영세업자들의 절망적인 환경과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표결이 아닌 합의, 사회적 대화 신호탄?

■ 정부와 언론들은 공익위원의 제시 금액에 대한 표결이 아닌 ‘3자 합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17년만에 최저임금 ‘합의’ 결정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 추진에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들이 밝혔듯,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이 역대급 저조한 것은, 정부가 사용자측 주장에 무게를 두고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현 정부의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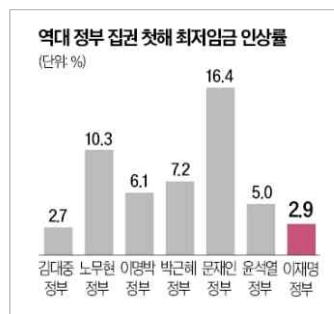
특히 민주노총 위원들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새 정부 첫 최임 결정, 노정관계 기능좌

■ 그동안 정부 출범 이후 첫 법정최저임금 인상률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 사용자, 노동자들의 역학관계와 셈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익위원의 태도를 통해 통째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곤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의 ‘IMF사태’ 급으로 현재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의 속내야 어떻든, 국

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한의 생계와 삶의 질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가이드라인” 올해 임금교섭 영향줄 듯

■ 법정최저임금은 금속노조 산별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사용자측은 법정최저임금 결정금액을 확인하고 산별최저임금 제시안을 제출하곤 했습니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2026년 산별최저임금은 ‘통상시급 11,210원’으로, 올해(10,150원)보다 1,060원, 10.4% 인상된 금액입니다. 올해 법정최저시급과 금속산별최저시급은 120원 차이입니다.

재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아쉽지만 선방했다”라는 반응입니다. 사용자들은 올해 중앙교섭을 포함한 사업장 임금교섭에서 이 점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3% 가이드라인’을 임금교섭 전략으로 사용한다면 노사간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동시에 이런 추이가 현 정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짐으로, 우리는 일시금(성과급)이 아닌 기본급(고정급)을 올리는 싸움에 무게를 두어, 안정적 생활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